

4차 추경 7조원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당정청, 고위 당정협의회 집합금지 명령 12개 업종 저소득층·아동 돌봄 등 지원 이번주 긴급 민생대책 발표 "추석 전 신속 집행 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지급 방식을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 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



정세균(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을 재고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금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을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일반 소

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가급적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

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회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누구도 부담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청에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극우단체 집회, 반사회적 행위" 개천절 광화문 집회 신고... "정부, 공권력으로 엄정 대응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하고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

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다음 달 3일에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년 재보선 기선잡기

이달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기획단 발족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위한 조직을 이달 중 띄운다. 재보선 조직을 7개월 전부터 만드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미니 대선' 급으로 커진 재보선의 무게감을 감안해 기선제압 차원에서 추석 마음을 잡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6일 "통상적 경우보다 조금 이르지만, 이번에는 준비된 전쟁을 치러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이달 안에 선거기획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기획단은 후보 선출 방식의 밀그림을 그린다. 동시에 선거전략을 세우고 정책과 공약을 개발·점검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재보선에서 외부 세력과 연대하지 않고 당 자체적으로 후보를 발굴해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외부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당에 입당하든지"라고 말했다.

당장 염두에 둔 후보가 있어서는 아니다. 그보다는 201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후보직을 양보했던 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입증 기록 공개

野 끝없는 의혹 제기... 변호인단, 무릎 수술 기록지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의 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

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아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입원기록·입퇴원확인서 등 일체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전자국회' 힘 받나

섯다운 반복에 원격 회의·표결 시스템 구축 논의 본격화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섯다운' 되는 일이 반복되자 원격 회의·표결 시스템 구축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새 시스템이 거대 여당의 '다수결 독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도 도입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당 의원총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무처에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이미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자국회' 추진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은 국회의장 출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여부가 있다"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어서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가득이나 폭주하고 있는 여권이 어느 날 원격 표결로 쉽게

의사봉을 두드려 날치기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176석의 절대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도 이 같은 의구심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일단 비대면 의회 시스템을 구축하되,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논의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대면 회의를 도입하더라도 당연히 여야 간 합의되는 정도에서 운용이 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오히려 부분이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p> <p style="text-align: center;">"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